

1950년대 극장 공간 재편에 대한 일고찰*

—극장 지정좌석제 논란을 중심으로

이지윤*

1. 들어가며
2. 극장 지정좌석제 시행 경과
3. 지정좌석제에 대한 우려와 무료입장제 폐지
4. 관람 환경 변화와 디제시스적 공간 재편
5. 나오며

국문요약

1950년대 중반에 등장한 극장 지정좌석제는 당대 극장 공간을 재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어떤 공간이든 힘의 긴장 관계가 내부화될 수밖에 없는데, 1950년대 극장 공간 역시 지정좌석제를 둘러싼 다양한 힘과 담론들이 갈등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본고는 당대의 지정좌석제 담론을 통해 극장 공간을 통한 힘의 긴장 관계와 이를 통한 공간의 재편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5년 11월, 극장 위생과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등장한 지정좌석제 시행 명령은 사회 내적으로 충분한 합의 없이 급작스럽게 도입됨으로써 도입 초기에 상당한 잡음을 일으켰다. 지정좌석제에 대한

* 이 글은 영상예술학회 제24회 추계학술대회 『1950년대 한국, 영화문화의 공간성과 국제 감각』(2015년 12월 12일)에서 발표한 「'참다운' 극장 공간을 위하여: 1950년대 중후반 극장 지정좌석제 논란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원

우려는 극장 흥행업계로부터 불거졌으며, 극장 측은 수입과 운영의 면에서 지정좌석제를 시기상조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기왕의 관행이었던 극장 무료입장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상이군인의 무료입장은 참여한 갈등의 대상이기도 했다. 건강하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한 상이군인의 몸은 사회적으로 부정되고 배제되는 존재였으며, 이런 점에서 상이군인은 극장의 '경제'와 '시각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존재는 분명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극장 무료입장에 대한 당국의 제제가 가해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극장 측의 우려와 반대 여론은 차츰 잦아들었다. 한편 지정좌석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역시 존재했다. 이는 주로 공연자 및 관람객들의 입을 통해 발화되었는데, 그들에게 지정좌석제는 극장의 소음들을 비디제시스 영역으로 내몰고 시청각 중심의 디제시스적 공간으로 극장을 재편한다는 점에서 긍정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 중후반의 극장 지정좌석제는 극장 공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극장 지정좌석제는 무질서와 불결의 원인으로 제시된 무료입장자 문제를 해결하고 잡스러운 소음들로 들끓던 극장에서 소음과 부산스러움을 소거함으로써, 부침을 거듭하던 시기의 불안정한 극장 공간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주제어: 1950년대 극장, 지정좌석제, 무료입장제, 상이군인, 디제시스적 공간, 극장 질서, 공간 재편)

1. 들어가며

“영화관에 간다. 표를 발권 받고 입장 시각에 맞춰 상영관 앞에 줄을 선다. 검표원이 표를 확인하고 입장을 안내한다. 나는 상영관 문 앞에 붙은 좌석 안내도에서 표에 적힌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들어가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기술한 것이다. 이 과정은 영화관(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한 이 행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자. 나는 표를 끊고 ‘내 자리’를 찾아가 앉는다. 만일 ‘내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면, 나는 당당하게 그곳이 ‘내 자리’라 주장할 것이다. 만 원 안팎의 요금으로 합당하게 지정된 그곳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내 자리’로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영이 끝나면 그곳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다. 상영 종료와 함께 그곳은 ‘내 자리’로서의 효력을 잃고 만다. 이는 영화관을 찾는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사회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자리’라는 인식, 다시 말해 이 같은 사회적 합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내 자리’라는 인식은 그 시작 시점에서 어떤 담론들을 양산하고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본고의 논지는 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극장의 ‘내 자리’, 달리 말해 ‘지정좌석’이라는 용어가 신문지면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중반 이후였다. 1955년 말부터 형성된 극장 지정좌석제 담론은 한국의 문화계를 민감하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입장료를 지불하면 어디든 앉을 수 있었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이다.¹⁾ 심지어 지정좌석제 도입 탓에 관객에게는 정해진 시각에 상영관에 입장하여 정해진 시각에 상영관에서 퇴장해야 하는 제약이 더해졌다. 극장 측 역시 좌석에 번호표를 붙이고 좌석 수만큼의 표만을 팔아야 하며, 심지어 시간별로 관객들을 교체 입장시켜야 하는 변화를 맞아야 했다. 따라서 1950년 중반 무렵에 도입된 극장 지정좌석제는 기왕의 관람 행동 양식과 극장 운영 방식을 교정해야 하는 ‘사건’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이 무렵 도입되기 시작한 지정좌석제는 영화를 포함한 공연예술의 관람과 흥행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50, 60년대 지방의 영화 관람 행위를 논하는 위경혜의 논문과 한국전쟁 이후 악극이 쇠퇴하는 과정을 살피는 이화진의 논문이 보여주는 당대 지정좌석제에 대한 해석은 본고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상당히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 위경혜는 논지 전개 과정에서 1955년의 극장 지정좌석제를 영화 관객이 기존 연행의 참가적 성격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 즉 관람 환경 변화의 사례로 바라본다. 기존의 관람 행위와 달리 지정된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관객에게 “극장 공간의 규범을 체득 및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관객을 침묵을 강요당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한다.²⁾ 한편 이화진은 지정좌석제와 함께 시작된 교체입장제는 낡은 것으

1) 물론 우리나라에 근대식 극장이 도입된 이래 구획화된 좌석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근대식 극장 초기부터 남녀 간의 좌석은 구획되었으며, 하층석과 상층석 역시 입장료에 따라 차등 구별되기도 했다. 따라서 근대식 극장의 도입은 성별과 입장료에 따른 관람석 차등 그리고 이로 인한 성별/신분별 차별화된 관람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 구획 내에서는 좌석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기왕의 관람 형태와 비교하여, 1950년대 중후반의 극장 지정좌석제는 성별 및 입장료의 차등이 없더라도 ‘1인 1지정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극장 및 관람 문화와는 다른 결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로 주변화되던 악극이 서울에서 무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정좌석제의 실제적인 효과는 “1류 극장과 2, 3류 극장, 서울의 극장과 지방의 극장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더욱 확고하게 한 데”에 있었다고 분석한다.³⁾ 지금까지의 한국영화 및 대중문화사에서 극장 지정좌석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극히 드문 가운데, 이 연구들은 지정좌석제를 당대 문화적 변화의 한 특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좌석제는 산업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의 과정에서 목격되는 주변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본고는 1950년대 중반에 등장한 극장 지정좌석제를 당대 극장 공간을 재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푸 투안은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분하며 “안전(security), 안정(stability)”의 성격을 띠는 장소와 달리 공간은 “개방성, 자유,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⁴⁾ 공간이라는 용어 자체에 ‘텅 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 텅 비어 있는 공간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에 개방적이고 자유롭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 담길지 모른다는 점에서 위협적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간을 경험하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획하고 구획된 공간에 위계를 부여한다. 이를 테면 공간을 전방과 후방 혹은 위와 아래로 구획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가치 체계를 통해 그 구획의 가치와 의미를 달리 매기는 것이다.⁵⁾ 이런 점에서 공간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장소’와 달리 관계에 의해 위계와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2) 위경혜,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지방의 영화 상영과 ‘극장가기’ 경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87쪽.

3) 이화진, 『‘노스탤지어’의 흥행사- 1950년대 ‘악극’의 전성과 퇴조에 관하여』, 『대중서사연구』 13/1, 2007.6, 65쪽.

4)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2011, 19쪽.

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2011, 64-87쪽.

곳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간의 내부에는 힘의 흐름이 늘 작용”하여 “어떠한 공간이든 사람과 관계된 공간에서는 지배, 배제, 억압, 연대, 저항, 갈등 등과 같은 힘의 긴장 관계가 내부화되어 있다.”⁶⁾ 따라서 우리가 특정 공간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이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을 통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는지 역시 살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55년 말 시작된 지정좌석제와 이를 둘러싼 담론들은 당대 극장 ‘공간’을 둘러싼 힘의 긴장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공간의 재편 양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1950년대 중반의 극장 지정좌석제 도입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돌출된 ‘우려’와 ‘긍정’의 목소리들을 통해 당시의 극장 ‘공간’이 어떠한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었는지를 추적해볼 것이다.

2. 극장 지정좌석제 시행 경과

1955년 말의 극장 지정좌석제는 급작스럽게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지면에 ‘극장 지정좌석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11월 초경이었다. 1955년 11월 7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관할기관에 지정좌석제 실시를 시달한다. 이는 “중전의 정원 초과 입장을 금하여 장내 질서와 풍기 단속 그리고 위생, 소방 시설 등을 정비하여 모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 진 것”⁷⁾으로 “극장에 대한 획기적인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의 분부사항에 속”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극장 지

6)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 아카데미, 2013, 28쪽.

7) 『좌석지정제 실시 각 극장에 지시』, 『동아일보』, 1955.11.8., 3쪽.

정좌석제가 “대통령의 분부사항”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는 극장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 ‘급작스러운’ 하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기에 지정좌석제가 제대로 실행되는 데까지에는 여러 잡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이 잡음의 중심에는 극장 흥행업계가 놓여있었다. 극장에 지정좌석제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극장은 관객을 교체 입장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왕의 극장 입장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지정좌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극장 상황에서, 극장은 좌석 수에 상관없이 관객을 입장시킬 수 있었고, 더욱이 프로그램이 상영 중이라 하더라도 관객에게 표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고된 지정좌석제는 극장이 좌석 수만큼의 표만을 팔아야 하며, 좌석이 비더라도 프로그램 상영 중에는 관객을 더 받을 수 없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지정좌석제가 실시되면 극장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1955년 11월 21일, 서울시 경찰국은 시내 극장연합회 대표들을 모아놓고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극장 측은 “경찰 당국 방침에 순응하고 지정좌석제 실시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명” 하였으나,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무료입장자’ 폐단을 해결해줄 것을 제안한다.⁸⁾ 이에 시 경찰국은 11월 23일, 군경 및 상이용사회 측과 시내 극장협회 측 대표들을 모아 또 다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날의 회의에서는 그간의 무료입장권을 11월 26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12월 1일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상이

8) 『극장에 지정석제: 혼란을 막기 위해 치안국서 지시』, 『조선일보』, 1955.11.8., 3쪽.

9) 『극장의 생태: 제일 큰 두통 무료입장』, 『동아일보』, 1955.11.23., 3쪽. 극장의 무료입장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좌석제 시행을 우려하는 극장 측의 담론을 다루는 3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용사를 비롯해 치안과 위생을 위한 임검 2인, 소방관 1인, 긴급 수사로 인한 극소수의 경찰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¹⁰⁾

이후 이러한 무료입장 단속은 어느 정도 효력을 보였지만, 지정좌석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정좌석제 시행 첫 날인 12월 1일, 서울시내 극장 실태조사 결과 시공관만이 지정좌석제를 시행했으며, 그 외 수도권극장과 국도극장, 단성사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¹¹⁾ 이에 대해 서울시 경찰국은 2일, 시내 각 극장 대표자들과 극장협회 측 대표자들을 불러 3일부터는 반드시 지정좌석제를 실시할 것을 하달했으며, “어떤 극장에 있어서도 입견자를 발견할 때에는 흥행장 및 흥행 취체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허가 취소 또는 흥행장 사용금지 등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 발표한다. 또한 그간 합의를 보지 못한 상이군인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시공관, 수도권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등 시내 4대 극장은 20석, 그 외의 극장은 각각 10석씩 상이군인 무료입장을 허할 것을 결정한다.¹²⁾ 그러나 이튿날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시내 극장 중 시공관과 국도극장을 제외한 극장들은 여전히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되었다.¹³⁾ 이러한 실태에 대해 극장 측은 입장권에 좌석표와 날짜 등을 인쇄하고 좌석 안내원을 증원, 극장 좌석에 번호를 칠하는 등의 제반사항이 준비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해명했지만, 언론들은 극장 측의 요구대로 무료입장이 전격 폐지되었음에도 극장 측은 이윤에만 급급하다

10) 『1일부터 지정제도 실시 당국과 극장 측 최종 합의』, 『동아일보』, 1955.11.25., 3쪽.

『관람 목적시 유료, 경찰관 극장 출입 한계』, 『동아일보』, 1955.11.27., 3쪽.

11) 『실천 안 된 지정좌석제』, 『경향신문』, 1955.12.2., 3쪽.

12) 『입견자 발견시 허가 취소 극장 지정좌석제 오늘부터 실시?』, 『동아일보』, 1955.12.3., 3쪽.

13) 『우선 입견자를 없애 시내 극장 지정좌석제 아직 실시 안 돼』, 『동아일보』, 1955.12.4., 3쪽.

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¹⁴⁾

해가 바뀌어도 지정좌석제 문제는 식을 줄을 몰랐다. 극장은 여전히 지정좌석제를 준수하지 않았고, 극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지정좌석제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혼란과 무질서를 낳기도 했다.

“단성사와 수도극장은 밖에서 다음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과 안에 있는 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국도극장은 밖에서 보기만해도 안에 서서 보는 사람들이 눈에 뜨일 정도로 관객이 객석에서 넘쳐 나왔고 밖에서는 표 사는 사람으로 혼잡하여 서로 밀고 떠미는 바람에 호사한 옷이 꾸기고 진흙이 튀고 그중 어느 부인은 ‘아이가 깔려 죽어도 당신들은 갈리지 않소’하고 임검 경찰관에게 호소했으나 임검 경찰관은 극장 안 현관에서 서 있을 따름이었다.”¹⁵⁾

흥행 대목인 설날의 극장 풍경을 묘사한 위의 글은 대부분의 극장이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일대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위 글에서 묘사하는 단성사와 수도극장의 풍경은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단성사와 수도극장이 지정좌석제를 엄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상영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곳의 풍경은 교체 입장에 의해 야기되는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지정좌석제와 교체 입장제로 인해 장내 질서가 확립되었을지 모르지만 장외 질서는 역설적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한편 극장은 여전히 수익 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었다. 시공관, 수도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등의 극장 측은 상이용사들을 제외한 무료입장자의 수가 줄어든 만큼 이들을 제외한 순 입장자의

14) 「전과 다름없는 극장 지정좌석제도는 말뿐이었나?」, 『조선일보』, 1955.12.2., 조간3쪽

「경제 레 대 이윤에만 급급하는 영화관의 맹정(상/하)」, 『경향신문』, 1955.12.6./7., 2쪽.

15) 「지정좌석제도 무사: 구정, 시내 일부 극장은 대혼란」, 『조선일보』, 1956.2.13., 3쪽.

수 역시 종전보다 1/3 가량 줄어들었다고 불평했다.¹⁶⁾ 일부 군소극장들은 원체 좌석 수가 적은 탓에 극장 수입이 줄어들었음을 호소하였고, 좌석 위치에 따라 관객이 앉기를 거부하는 자리가 있어 모든 좌석을 판매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항변하기에 이른다.¹⁷⁾ 이에 따라 1956년 7월 8일, 치안국은 시립극장(시공관), 수도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중앙극장 등 5개 극장만을 지정좌석제 시행 극장으로 한하고, 그 외 2류 이하의 극장들에 대해서는 지정좌석제를 철회하는 내용을 발표한다.¹⁸⁾

이후 지정좌석제가 서울시 단위, 나아가 전국적 단위로 확대된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서울시 단위로나마 지정좌석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1958년경에 포착된다. 1958년 11월 6일, 문교부는 극장 측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내 47개 극장 대표 30명과 극장 감독 기관인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참석했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극장 제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고 보고된다.

“이날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극장의 시설 등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지시하는 한편 특히 학교 주변 정화 실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엄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전기 지시 사항의 중요 골자는 대소극장을 막론하고 다음 제 사항을 엄수하라는 것이다. ▲변소 소독 ▲환기 장치 완비 ▲방화 시설 완비 ▲관람자 준수 사항 게시판 설치 ▲정원 입장 엄수 ▲홍행 허가 수속 엄수 ▲좌석지정제 준수 ▲종업원의 자기 향상 도모”¹⁹⁾

16) “아침결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 거의 예외 없이 1회, 2회 공연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며, 2류 극장, 예컨대 명동극장 같은 곳은 현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한다.” 「극장 측에서는 비명, 관객층은 호평: 좌석지정제 등 실시 70일 후의 실태」, 『조선일보』, 1956.2.13., 3쪽.

17) 「수지 안 맞는 2·3류 극장, 좌석제의 폐지를 호소」, 『동아일보』, 1956.7.4., 3쪽.

18) 「봉질관 외 철폐, 극장 지정좌석제」, 『경향신문』, 1956.07.09., 3면; 「2류 극장의 지정좌석제 폐지」, 『동아일보』, 1956.7.10., 3쪽.

19) 「음란한 간판 제거: 문교부, 극장 대표와 연석회의」, 『한국일보』, 1958.11.7., 3쪽.

이상으로 지금까지 서술한 극장 지정좌석제 시행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극장 지정좌석제 시행 경과

날짜	내용	비고
1955.11.07	치안국, 전국 관할기관에 지정좌석제 실시 시달	
11.21	서울시 경찰국과 시내 극장연합회 대표자간 연석회의 개최	무료입장자 폐지 선결조건으로 지정좌석제 동의
11.23	군경, 상이용사회, 시내 극장협회 대표자간 연석회의 개최	11월 26일부로 무료입장권 폐지 (상이군인, 임석 경관 2인, 소방관 1인, 수사상 부득이한 경우의 경찰 제외), 12월 1일부로 지정좌석제 시행 합의
12.01	지정좌석제 시행	
12.02	서울시 경찰국, 3일부터 지정좌석제 불이행시 엄중 단속할 것이라 발표	시공관/수도/국도/단성사 : 상이군인 무료입장 20석 그 외 극장: 10석으로 제한
1956.07.08	치안국, 시립극장(시공관)/수도/국도/단성사/중앙 등 5개 극장에 한해 지정좌석제 시행 발표	
1958.11.06	서울시내 47개 극장 대표자 회의 개최	서울시 교육위원회, 극장 업무 사항 중 하나로, 대소극장 막론 지정좌석제 준수 시달

그러나 지정좌석제 위반 사례와 이로 인한 또 다른 폐단은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를 않았다. 1959년 5월까지도 언론은 시내 대다수의 극장에서 여전히 입견제가 장려되고 있으며 좌석 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표를 팔거나 번호가 기입되어 있더라도 탈세 목적으로 그것을 이중으로 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⁰⁾ 더 나아가 1960년경에는 안 좋은 위치의 좌석에

20) 『뒤올거먹는 극장표: 찢지 않고 몇 번씩 버젓한 탈세? 개봉관서도』, 『한국일보』, 1959.5.26., 3쪽; 『일대 혼란을 일으킨 개봉극장 입견표도 정원으로』, 『서울신문』,

는 관객들이 앉으려고 하지 않아 암표 거래까지 횡행하는 폐단이 보고되고 있다.²¹⁾ 이에 따라 치안국은 지정좌석제를 보다 철저히 단속할 것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감시와 처분의 문제는 1960년대 초까지도 계속되었다.²²⁾

3. 지정좌석제에 대한 우려와 무료입장제 폐지

지금까지 지정좌석제 시행 경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정좌석제는 맨 처음 대통령의 분부사항으로 시달된 제도로서, 필요의 당위성이 사회내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리고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수렴될 새도 없이 급작스럽게 도입된 것이었으며, 그 결과 극장 측의 반발은 상당했다. 지정좌석제는 좌석 수만큼의 관객만을 입장시켜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극장의 입장에서 이는 운영의 측면에서나 수익의 측

1960.3.3., 3쪽 등. 한편 정부는 1962년 3월부터 극장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인구 20만 이상 도시인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도시 극장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인쇄한 입장권만을 사용해야 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간 극장이 한 장의 입장권을 여러 번 재사용하여 감시의 눈을 피해왔던 것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 역시 극장 지정좌석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송영애, 『조상림』, 〈1960-1970년대 영화관〉 주제사 구술채록연구팀, 『201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한국영상자료원, 2010, 50쪽, 주 83번 참고.

21) 『자유총극장 입장권 암매를 없애라』, 『조선일보』, 1960.2.18., 석간 4쪽.
22) 1960년 6월, 서울시경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정원 초과 실태 조사 결과, 대한극장, 을지극장, 중앙극장, 아카데미 극장, 국제극장, 단성사가 지정좌석제를 무시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8월에는 국제극장이 이들의 후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모두 좌석제를 무시: 극장 실태 조사서 판명』, 『동아일보』, 1960.6.8., 석간 3쪽; 『국제극장에 이틀 휴관령』, 『서울신문』, 1960.8.13., 석간 3쪽 참고. 그 밖의 단속과 위반 사례로는 『정관처분 방침: 지정좌석 위반 극장』, 『동아일보』, 1959.4.29., 3쪽; 『극장 일제 단속』, 『조선일보』, 1960.7.9., 석간 3쪽 등 참고.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정좌석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관객 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료입장자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지정좌석제 시행일 전, 한 신문기사는 극장 측의 목소리를 빌려 현 극장의 문제를 전하는데, 이 역시 대체로 ‘무료입장자’ 문제로 일축된다.

"어느 극장이고 경영자 측에서 가장 비명을 울리는 점은 아무래도 이 무료입장 문제-경영자 측 말에 의하면 하루 평균 무료입장자 수는 전 입장자 수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며 심지어 일요일에는 60 내지 70%를 차지할 때도 있다는 놀라운 숫자. (...) 무료입장자의 전폐만 기할 수 있다면 좌석지정제가 실시되는 것이 도리어 경영상에는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극장 측의 말. (...) 무료입장자일수록 풍기 문제에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이 극장 측의 말."²³⁾

물론 여기서 언급된 통계 수치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극장의 입장에서 무료입장자는 수익 상의 상당한 골칫거리였으리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기사는 더 나아가 서울시내 한 극장을 대상으로 1955년 10월 한 달 동안의 무료입장자 수를 조사했는데, 총 입장 인원 107,933명 중 무료입장 인원이 22,600명으로 전체의 약 20%에 달했으며, 이들은 “각종 패스 소지자”(취재증, 공용증, 각종 우대권 등 10여 종)를 비롯해 “권력, 완력을 이용해 입장하는 특권층”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았다.

"▲취재증(극협 발행)=1,800 ▲우대권(극협 발행)=7,091 ▲단속증=1,800 ▲순찰공용증=4,070 ▲세무기관=127 ▲극협 관계=162 ▲상이군인=4,300 ▲각 신문사=130 ▲경찰관=240 ▲헌병·특무대=250 ▲공군·해군=319 ▲포스타권=1,123"

그런데 다종의 무료입장자 중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상이군인 및

23) 『극장의 생태: 제일 큰 두통 무료입장』, 『동아일보』, 1955.11.23., 3쪽.

군경의 무료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정좌석제 사안을 놓고 서울시 경찰국이 주최한 두 차례의 연석회의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지정좌석제에 대한 극장 측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시내 극장연합회 대표들을 모아 개최한 11월 21일의 첫 연석회의가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난 후, 서울시 경찰국은 이틀 후인 11월 23일에 두 번째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두 번째 회의는 21일의 회의 내용을 반영할 결과라 추측되는데, 21일 연석회의에서 극장 측은 지정좌석제 도입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선결 조건으로 무료입장자 폐단을 막아줄 것을 당국에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극장 측의 반발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서울시 경찰국은 이틀 후인 23일에 서둘러 두 번째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을 것이며, 그 의제는 단연 무료입장 문제로 모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1차와 달리 2차 회의에서는 시 경찰국과 극장 측 대표들 외에 군경 측과 상이용사회가 참석한 것이다. 다종의 무료입장자 중 특별히 군경과 상이용사가 호명되었다는 점은 이들의 무료입장이 참여한 입장에서 서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타의 무료입장자들에 비해 이들의 무료입장이 폐지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무료입장은 그 외의 무료입장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경과 상이군인의 무료입장이 그 밖의 유형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극장의 입장에서 군경과 상이군인의 무료입장은 유독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위에 인용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상이군인에게 발행한 공용증은 4,300장, 군경 대상은 6,679장(단속증, 순찰공용증, 경찰관, 헌병·특무대, 공군·해군 포함)으로 총 10,979장이었으며, 극협에서 발행한 취재증과 우대권, 극협 관계자에게 허용된 공용증은 9,053장, 극장 운영과 흥

행을 위해 필요했으리라 추측되는 세무기관과 신문사 발행 공용증, 포스타권이 1,380장에 이른다. 상이군인 및 군경을 제외한 부류들 역시 극장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전자의 부류만큼 무료입장 수를 접하고 있었지만, 잠정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이러한 유형의 무료입장자들은 극장 운영 내지는 흥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들로써, 극장 '경제와 맞닿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런 점에서 고려해볼 때 상이군인과 군경의 무료입장은 이들과는 달리 극장의 경제적 이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허용된 군경과 상이군인의 무료입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윤리적 당위성, 즉 안보와 치안 그리고 전쟁 참전에 대한 예우이자 위무에서 허용된 것이라 여겨졌다.²⁵⁾ 그러나 이 무렵 군경과 상이군인, 특히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상당히 양가적이었으며, 이로 미루어 이들의 무료입장에 대한 극장 측의 시선 역시 그리 좋지만은 않았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상이군인은 신체적 손상과 결함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반대로 그러하기에 단속과 배재의 대상이기도 했다. 당시의 신문들은 상이군인들의 폭행과 각종 행패를 시시각각 보도했으

24) 일례로 『경향신문』 1955년 12월 6일의 사실은 군경과 상이군인에 대한 입장료 할인제를 전폐한 극장 측의 '모리배성'을 비판하는 한편, 극장주들의 이용가치에서 발행된 우대권 및 취재권 등 역시 이와 함께 폐지함으로써 "이용가치가 큰 것만큼 그것이 전폐됨으로써 오는 결손도 정비례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경제 레더: 이윤에만 급급하는 영화관의 맹점(상)』, 『경향신문』, 1955.12.6., 3쪽.

25) 한국일보사가 1955년 12월에 개최한 극장 관련 좌담회에서 전국극장연합회장 백순성은 극장 무료입장이 "6·25 동란으로 상이군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공용증"이라는 것을 발급하여 "우대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말한다. 사실 무료입장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흥행계의 관행이었지만, 백순성의 이 같은 발언은 상이군인의 무료입장에 대한 극장 측의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극장을 살리는 길: 경영주들이 말하는 좌담회』, 『한국일보』, 1955.12.29., 4쪽.

며,²⁶⁾ 이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 역시 이어졌다. 이들의 폭행이 전체 사회 범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폭력 시비가 더욱 부각되었던 이유는 이들의 몸이 전시하는 그로테스크함 혹은 시각적 혐오성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들의 그로테스크한 몸은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도 부정되는 것이었다. 임지연은 상이군인들의 신체를 ‘현대성’의 견지에서 해석하는데, 이들의 몸은 1950년대 현대성이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몸과 대비되는 “비창조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자연적인” 훼손된 몸으로서, “전후 재건 과정에서도 생산적이고 건강한 국민 주체이기는커녕, 혼란과 무질서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적 몸”이었다. 그러하기에 당시 사회가 재발견한 건강한 몸에 대한 긍정은 역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상이군인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배제하는 원리”가 되었다.²⁷⁾ 이런 점에서 극장 지정좌석제와 무료입장자 시비가 불거지던 무렵, 생산적이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몸을 전시하는 상이군인은 극장의 ‘경제’와 ‘시각성’의 차원

26) 『상이군인 행패 단속』, 『경향신문』, 1954.8.14., 2쪽; 『공갈죄로 구속, 상이군인 4명』, 『경향신문』, 1955.6.16., 3쪽; 『공정선거에 많은 의문: 지방에서 야당 측 참관인 구타 사건 집중』, 『동아일보』, 1956.5.16., 1쪽; 『상이군인 50명이 폭행』, 『경향신문』, 1958.3.5., 3쪽; 『빠에서 폭행: 상이군인 구속』, 『동아일보』, 1958.5.17., 3쪽; 『이유 없이 기자 구타: 주점서 상이군인이』, 『경향신문』, 1958.5.17., 2쪽; 『상이군인 집단 행패』, 『경향신문』, 1958.8.10., 3쪽; 『상이군인-반공청년 패싸움』, 『동아일보』, 1959.4.27., 3쪽 등 참고.

27) 임지연의 해석에 따르면, 1950년대 현대성 담론은 외적으로는 1, 2차 세계대전과 내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구적 이성의 과잉을 반성하고, 합리적 이성이 오랫동안 억압해온 ‘몸’을 현대성 비판과 함께 재발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재발견되는 몸이란 “건강하고 생명적이고 본능적인, 자연적 질서에 충실한 몸”으로서만 긍정된다. 일례로 ‘아프레 걸’, ‘댄스홀에 빠진 여성들’, 박인수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모두 “성적 방종과 과잉된 몸을 드러내는 50년대 공론장의 적들”이었으며, 이들을 비롯하여 상이군인과 같은 훼손된 몸, 건강하지 못한 몸은 모두 현대성 담론이 재발견한 건강한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임지연, 『상이군인·그로테스크·현대성』,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 쿠북, 2010.

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내비쳐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점에서 무료입장자 폐단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결국 군경의 무료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1955년 11월의 2차 연석회의를 통해 폐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상이군인의 무료입장은 1955년 12월 초, 서울시 경찰국의 발표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고, 1956년 말경에는 이미 폐지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56년 11월, 지정좌석제를 둘러싼 잡음들이 한풀 꺾인 시점에서 국방부 정훈국장 이경석은 극장 관람에 대한 군경 반액제와 상이군인 무료입장제 폐지가 “작은 문제로 취급”되어 그들에 대한 예우가 묵살되어버린 현실을 애석해한다.²⁸⁾ 이경석의 글을 통해 상이군인 무료입장은 적어도 이즈음에 이르러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이후의 담론들에서 지정좌석제를 우려하는 극장 측의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결국 지정좌석제에 대한 우려 여론은 그간의 무료입장 관행, 그중에서도 군경 및 상이군인, 특히 상이군인의 무료입장 문제에 맞춰졌던 것이며, 이후 이들의 무료입장에 제제가 가해지면서 극장은 지정좌석제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극장은 지정좌석제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지정좌석제를 준수할 것인가 위반할 것인가의 문제만을 남겨둔 셈이었다. 실제로 신문지면을 오르내린 지정좌석제 관련 보도들은 1950년대 중반과 1950년대 후반 이후가 전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은 한국사회 내에서 처음 거론된 지정좌석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혹은 옹호와 우려의 여론으로 들끓은 시기였던 반면, 1950년대 후반 이후는 이러한 여론은 사라지고 지정좌석제를 위반한 극장에 대한 단속 사례만이 언급되는 시기였기 때문

28) 이경석, 「군인과 극장: 그들에게 좀 더 편리한 방법을」, 『경향신문』, 1956.11.8., 4쪽.

이다.

4. 관람 환경 변화와 디제시식적 공간 재편

한편 지정좌석제가 극장계에 도입되는 과정에는 전술한 내용처럼 비단 우려의 목소리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신문지면에는 지정좌석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역시 발견되는데, 이는 특히 관객 및 공연관계자의 입을 통해 발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정좌석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이를 시달한 중앙에서 예기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객 및 공연 관계자들의 ‘예기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위해 먼저 당대 정권은 지정좌석제의 의의를 일반에 어떻게 설파했는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극장을 몇 가지 고칠 조건이 있다. 첫째는 모든 극장에 돈 내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들의 수효가 많아서 폐단이 되게 이르렀다는 공론이 있으니 이것을 정부의 지령으로 막도록 할 것이다. 둘째는 극장에 사람 앉을 자리에 한도가 있는 것을 그 한도에 지나게 입장권을 팔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혼동되는 폐가 있으니 이것은 입장권 사는 사람에게도 공평치 못한 것이고 그 출입하는 길목을 막아놓고 보면 그 극장에 급한 일 있을 때에는 위험한 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폐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통 행하는 사진관 방식을 고쳐서 구라파에서 보통 행하는 그 방식을 취하여 그 연극이 필한 뒤에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시 받아서 극장을 다시 채우게 하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는 극장에서 담배를 일체 금하는 것이 보통 통레이니만치 우리 극장에서는 흡연하는 것은 금해야 모든 손님에게 대접도 되고 또 극장 자리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변소에 사람을 두어 상시 청결하게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극장을 깨끗하게 할 것을 공포해서 각 극장에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⁹⁾

극장 지정좌석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료입장자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21일, 상기 인용한 담화문을 발표한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극장 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입장자를 정부 시령으로 막을 것과 예정대로 극장의 지정좌석제와 교체 입장제를 시행할 것 그리고 극장 내 흡연을 금지하고 화장실 청결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모든 방법으로 극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극장’이란 비단 장내 흡연 및 화장실 문제와 관련된 극장 청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극장의 폐단이 되고 있는 무료입장자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원 초과로 인해 빚어지는 혼돈을 막는 것, 관객들을 교체 입장 시키는 것 모두 ‘깨끗한 극장’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된다. 따라서 이 담화문에서 말하는 ‘깨끗한 극장’이란 위생과 질서의 문제를 ‘바로잡은’ 극장을 의미한다.

이 담화문 발표에 이어, 『조선일보』의 한 논설은 이 담화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해당 논설은 실제 극장 내 흡연 행위,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예의 없는 행동들, 장내의 소음 등이 “신경질이 나고 불유쾌해져서 돌아가는 경우”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시달한 내용, 즉 무료입장자 폐지와 지정좌석제·교체입장제 도

29) 『무료입장 막으라, 이 대통령 극장 문제 담화』, 『동아일보』, 1955.11.23., 3쪽. 한편 이와 같이 극장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언급은 1950년대 중반의 한국영화계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무렵은 가깝게는 1955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영화제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며 한국영화의 세계 진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던 시기였으며, 1954년의 국산영화 입장세 면세 조치를 계기 삼아 한국영화 제작이 활기를 띤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특히 1955년 1월,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여 2개월간의 장기 흥행 기록을 세운 〈춘향전〉(이규환)은 이 같은 활기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에 극장에 대한 지정좌석제 실시 및 위생과 청결 등의 문제가 대통령의 발화를 통해 거론된 것은 영화계의 변화와 상당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강할 계획이다.

입, 극장 내 흡연 금지 등을 통해 “공중도덕을 지키어 장내에서 **함은 물론 각자 **하여 조용히 영화나 연극을 감상할 명랑하고도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은 식별 불가 인용자”³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과 『조선일보』의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극장 지정좌석제(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무료입장제 폐지와 교체 입장제 시행)는 극장 질서 확립과 쾌적한 공간 조성이라는 대의적 명분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 제도가 꺾한 이 같은 명분은 1956년 2월, 지정좌석제가 실시된 지 2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극장 공간을 향유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음악가 임원식 씨 담: 좌석지정제가 되어서 우리 음악인들은 참다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극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연주자에게도 그러하겠지마는 동시에 참다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음악 팬들도 절대로 이 좌석지정제를 지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서 무료입장자도 없고 초대권도 없는 순수한 좌석지정제에 의한 연주회가 수지 균형이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한시바빠 왔으면 한다.

극 연출가 박진 씨 담: 지금 우리 현상으로는 극장 운영 내지 극단 운영 면으로 볼 때 이 좌석지정제는 일단 재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날을 생각할 때 그리고 감상하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좌석지정제는 절대로 좋다. 질서도 잡히고 장내 공기도 약간은 좋아지고 또 그 위에 객석과 무대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참다운 극장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극인에게도 물론 좋은 것이다.

여대학생 김선경 담: 우선 요사이 극장에 드나드는 사람의 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장내가 정숙하고 아늑하며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요.”³¹⁾

30) 『명랑한 분위기와 공덕』, 『조선일보』, 1955.11.23., 2쪽.

31) 『극장 측에서는 비명, 관객층은 호평: 좌석지정제 등 실시 70일 후의 실태』, 『조선일

『조선일보』는 1956년 2월 13일, 지정좌석제에 대한 공연자와 관객의 반응을 위와 같이 전했다. 위에 인용한 음악가 임원식,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박진, 일반 관객인 여대생 김선경은 모두 지정좌석제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원식은 극장 지정좌석제의 의의를 공연자의 입장에서는 “참다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극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참다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박진을 비롯하여 여대생 김선경의 말에서도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하게 발견된다. 임원식이 말한 참다운 극장의 분위기란 박진의 표현에 따르면 “객석과 무대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객석과 무대가 혼연일체가 되는 참다운 극장 분위기란 쉽게 말해, 여대생 김선경의 말처럼 “[공연물]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물론 임원식과 박진은 공연자의 입장에서 지정좌석제 시행을 위한 여건이 여전히 미흡함을 피력하고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참다운” 극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극장 지정좌석제의 의의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과 1955년 11월 23일의 『조선일보』 논설에서 발견되는 대외적 명분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의 해석을 이끈다. 임원식이 말하는 ‘참다운 극장’, 박진이 말하는 ‘무대와 객석의 혼연일체’ 그리고 일반 관객이 말하는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질서 확립’과 ‘쾌적한 공간 조성’이라는 명분을 넘어, 그로 인해 극(혹은 공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 관객 김선경이 “장내가 정숙하고 아늑하며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 관객이 공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아

보』, 1956.2.13., 3쪽.

마도 극장의 소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상상해보건대 지정좌석제 시행 이전, 좌석 수를 초과하여 수용된 관객들로 인해 북적이던 극장안의 무질서는 다양한 잡스러운 소음들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극장의 질서가 서서히 잡히고 극장을 어지럽히던 여러 소음들이 사라질 때, 관객들은 비로소 공연/극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연/극이 관객들에게 펼쳐 보이는 허구적이고 인위적인 세계가 디제시스라면, 다양한 소음으로 가득한 날 것 그대로의 객석은 비디제시스가 된다. 따라서 극장 지정좌석제는 날 것 그대로 생생한 객석의 소음(비디제시스적 소음)을 디제시스로부터 분리시키고, 온전한 디제시스를 위해 이를 소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경우를 상상해보자. 지정좌석제 시행 이전, 관객들은 극장에 입장하면 아무 곳이나 원하는 곳에 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연/극이 시작된 이후에도 원한다면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관람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서서 보기라도 자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정좌석제와 함께 관객들에게는 특정 한 좌석만이 지정된다. 앉기를 원치 않는 좌석이라 하더라도 관객은 배정 받은 좌석에 앉아야만 한다.³²⁾ 결국 관

32) 당시의 신문기사에서 언급되는 지정좌석제로 인한 관객들의 불만은 '좌석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1956년 7월경, 지정좌석제 폐지를 호소하는 2·3류 극장들의 입장을 보도하는 기사에서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는 (앞 좌석) 손님들이 입장을 주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하고 있다. 『수지 안 맞는 2·3류 극장: 좌석제의 폐지를 호소』, 『동아일보』, 1956.7.4., 3쪽. 한편 1960년 초의 한 신문 독자는 극장에서 목격한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로 입장권의 암거래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관객들이 좌석 위치에 따라 입장을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일요일 사관학교에 가 있는 아우가 휴가로 왔기에 모처럼만에 K극장엘 갔다. 마침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극장 앞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섰는데, 2시간 후에나 입장할 표밖에는 팔고 있지 않다. 그것도 나쁜 위치의 것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다가오더니 2층의 좋은 좌석의 표가 있으니 사라는 것이다. (...) 가만히 보니 이러한 암표를 파는 사람이 그 소년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무수히 있는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아우와 같이 갔기에 하는 수 없이 사긴 샀지만 그로 인하여 가벼웠던 마음엔 그늘

객은 공연/극이 시작되면 움짱달짝 못하고 특정 좌석에 몸을 메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좌석제는 관객의 신체를 한 좌석에 고정시킴으로써, 그리고 비디제시스적 소음들을 소거함으로써 관객들의 모든 감각을 오로지 무대 위(혹은 스크린 위)의 디제시스적 세계로 집중하게 한다. 극장 지정좌석제는 음악 감상의 면에서는 극장에 산재한 비디제시스적 소음들을 소거하고 디제시스적 사운드(음악)로 가득 메워진 공간으로 극장을 바꾸는 것이었으며, 연극/영화 감상의 면에서도 객석의 비디제시스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시청각 중심의 디제시스적 공간으로 극장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³³⁾ 임원식이 말하는 “참다운 음악 감상”, 박진이 말하는 “객석과 무대가 혼연일체 될 수 있는 참다운 극장 분위기”는 이처럼 디제시스적 세계를 위해 조성된 극장 공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³⁴⁾

결국 극장의 지정좌석제는 디제시스를 위한 공간(영화 혹은 공연물이 상영(연)되는 스크린/무대 위)과 비디제시스적 공간(객석)을 분리하고,

이 저 모처럼의 상쾌했던 일요일의 기분은 깨어지고 말았다.” 『자유춤 극장 입장권 암매를 없애라』, 『조선일보』, 1960.2.18., 석간 4쪽.

33) 본래 디제시스(diegesis)는 서사 내에 구축된 허구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정좌석제가 극장 공간을 상영(연) 중인 텍스트 외부의 소음과 부산스러움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서사 텍스트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재조정하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지정좌석제로 인해 경험되는 새로운 극장 공간을 ‘디제시스적 공간’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와 반대로 디제시스 안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소음과 부산스러움 등으로 가득 찬 객석 공간은 편의상 ‘비디제시스적 공간’으로 구분할 것이다.

34) 특히 동 기사는 지정좌석제로 인한 이러한 효과가 음악 감상 면에서 특별히 더 큰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음악 팬들에게는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데 (...) 이제는 극장 특히 개봉관 같은 곳은 입장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동시에 질서가 잡혀졌기 때문에 영화, 연극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로 인해서 음악회의 질서와 감상 조건은 지극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극장 측에서는 비명, 관객층은 호평: 좌석지정제 등 실시 70일 후의 실태』, 『조선일보』, 1956.2.13., 3쪽.

극장 공간을 디제시스적 공간으로 재편함으로써 관람 환경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변화된 관람 환경은 위 인용문처럼 이를 긍정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경험으로 인식된 것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질서 잡힌’ 극장 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지정좌석제는 공간을 향유하는 이들에게 도입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나리오 작가 이청기는 기존의 관람 방식은 “어떤 야외의 공 구경터보다도 더 한층 복잡”하여 “예술의 올바른 감상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었으며 “문화적 후진성을 자인하는 관객의 자비성의 축적으로 습성화된 저속한 인식 태도”였다고 지적하고, 지정좌석제를 “문화국 대한의 창건에 획기적인 모멘트이며 또한 건전한 스태프”으로 해석한다.³⁵⁾³⁶⁾ 다시 말해 이청기는 디제시스적 공간과 비디제시스적 공간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기존의 공간은 후진적인 것이며, 두 공간을 분리하고 디제시스적 공간으로 통합된 새로운 공간은 “문화국 대한”을 위한 공간이라 해석한다.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후진성과 근대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후진성으로 인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전후 한국사회에서 극장 지정좌석제는 공간 향유자들에게 이러한 의의로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5) 이청기, 「지정좌석제와 무료입장」, 『조선일보』, 1955.12.4., 4쪽.

36) 한편 극장 지정좌석제는 명랑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조용히 영화나 연극을 감상할 명랑하고도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랑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술선수범하여 지정좌석제를 지켜야 “향상도 있고 발전도 있”다는 논리로 지정좌석제 시행에 대한 긍정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명랑의 코드’가 극장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명랑한 분위기와 공덕」, 『조선일보』, 1955.11.23., 2쪽). 극장 공간의 명랑화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논의를 보강할 계획이다.

5.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생과 질서의 명분으로 급작스럽게 시달린 지정좌석제는 초기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극장 공간의 변화와 재편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 시행 이후 일부 공연자들과 감상자들에게 지정좌석제가 극장 소음들을 비디제시스 영역으로 내몰고 극장을 시청각 중심의 디제시스적 공간으로 재편한 계기로 인식되었음은 물론이고, 무료입장자 문제를 앞세워 지정좌석제를 우려하던 극장 측 역시 무료입장 문제가 해결되자 반대의 목소리를 접는 한편, 지정좌석제에 대해 변화된 태도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세중앙극장 총무부장 서정하: [1955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 상영을 되짚으며 골치 아픈 사실은 휴게실이나 변소나 장내를 분간 못하는 관객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데서나 소변 같은 것을 하는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영화가 가장 보편화된 대중성을 가진 영화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고정 관객이라고 보고 있는 관객도 왔나하면 의문입니다. 요새는 단순히 시간이나 낭비하러 오는 관객은 거의 없으니까요."³⁷⁾

([] 내용은 인용자)

극장계 흥행 작품과 관객 성향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중앙극장 총무부장 서정하는 1955년 1월에 개봉한 <춘향전> 때의 관객과 1957년의 관객을 위와 같이 비교한다. 비교 사례로 <춘향전>의 관객이 거론된 것은 이 영화가 국산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흥행을 거두며 이후 한국영화 제작의 활기를 불어넣은 작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가 1955년 12월의 지정좌석제 시행 전 개봉한 작품이

37) 『팔리는 영화·안 팔리는 영화: 개봉극장·영화사 관계자들의 방담(放談)회』, 『한국일보』, 1957.4.7., 6쪽.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객 태도의 변화는 지정좌석제 시행을 기준으로 달라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서정하의 발언은 지정좌석제 시행 이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료입장자가 단속된 이후에는 공중도덕을 모르며 “시간이나 낭비하러 오는”, “고정 관객이라고 보고 있는 관객”과는 대별되는 관객(이를테면 무료입장자)이 줄어들어 극장의 질서가 잡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55년 말에 불거진 지정좌석제를 둘러싼 잡음들은 이 무렵에 이르러 수면 아래로 잠잠해지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이 어느 정도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극장은 지정좌석제 준수와 위반의 선택적 갈림길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0년대 후반의 극장 공간은 지정좌석제라는 새로운 규율로 재편되는 일만을 남겨둔 셈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 중후반의 극장 지정좌석제는 불안정한 공간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공간이 재편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의 무질서한 극장은 ‘공간’이 지니는 특성대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에 개방적이고 자유롭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 담길지 모르기에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공간이었다. 불안정성을 안정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공간에 위계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정좌석제는 도입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개입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료입장자들로부터 초래된다고 믿어진 무질서하고 청결하지 못한 극장에 ‘질서’라는 위계를, 잡스러운 소음들로 들끓는 극장에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위계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 재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구술채록문 및 신문기사

송영애, 『조상림』, 〈1960~1970년대 영화관〉 주제사 구술채록연구팀, 『2010년 한국 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한국영상자료원, 2010.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각 기사.

2. 논문과 단행본

위경혜,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지방의 영화 상영과 ‘극장가기’ 경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이화진, 『‘노스탤지어’의 흥행사-1950년대 ‘악극’의 전성과 퇴조에 관하여』,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13권 1호, 2007.6, 43-72쪽.

임지연, 『상이군인·그로테스크·현대성』,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 쿠북, 2010, 135-156쪽.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 아카데미, 2013.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Theater Space in the 1950s
- The Controversy over the Reserved Seating Policy

Lee, Ji-Youn(Korean Film Archiv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erved seating system in the mid-1950s was a significant event that restructured the theater space in Ko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ense power dynamics cannot but be internalized in all spaces, the theater space in the 1950s was reorganized as various powers and discourses surrounding the reserved seating system ca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By studying various discourses on the reserved seating syst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wer dynamics in the theater space and the aspects of the reorganization of space which resulted from such power dynamics.

In November 1955,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an enforcement order to implement a reserved seating system in theaters under the pretext of keeping theaters sanitary and orderly. As this system was abruptly enforced without sufficient agreement within the society, the new policy came under fire at the onset of implementation. The theater industry first voiced concerns about the reserved seating system, which they believed was premature considering the level of profits and the operation of theaters. As part of this argument, the issue of free admissions rose to the surface. An established custom at theaters, free admissions, particularly for disabled veterans, became the topic of a raging controversy. Disabled veterans were socially denied and excluded because of their unhealthy and unproductive bodies, and as a result they were not considered positive existences in terms of the "economy" and "visualness" of theaters. However, when the authorities began to impose restrictions on free admissions at theaters, the concerns of the theater owners and oppositions gradually died down.

There were positive reactions to the reserved seating system as well, mainly from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who acknowledged that the new policy would

reorganize theaters into diegetic space of auditory and visual senses while confining unwanted noise to non-diegetic space.

In this context, the reserved seating system of the mid 1950s in theaters have transformed and reorganized the theater space. The reserved seating system resolved the issue of free admissions, which were criticized as the root cause of disorderliness and filthiness at theaters, and also eliminated noise and bustle from theaters, thereby serving as a momentum to bring stability to the unstable theater space during the time of turbulence and for Koreans to overcome cultural inferiority.

(Key Words: Theaters in the 1950s, reserved seating system, free admissions, disabled veterans, diegetic space, order in theaters, reorganization of space)

논문투고일 : 2016년 4월 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 2016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14일